

與 당 대표, '친명' 양자 대결 유력... 호남 최대 승부처

박찬대, 오늘 공식 출마 선언
정청래, 봉하마을 등서 표받같이
권리당원 55% 반영... 호남 최대
광주·전남 표심 공들이기 '주목'



정청래 의원

박찬대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대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8·2전대는 당 대표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져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광주·전남 등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이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박 의원도 23일

출마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 의원 간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지도부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끈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통한다.

정권 초반인 만큼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누가 더 '친명'이나를 두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시점에 지지층 일각에서 비방전까지 전개되자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페이스북을 통해 비방 자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호남 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정·박 의원 모두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호남 지역 당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번 대선에서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주로 누빈 정 의원은 최근 선거 답례 인사 성격으로 다시 호남 지역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을 늘렸다. 그는 전날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이날은 강원도를 찾는 등 한발 먼저 표밭 같이 나섰다.

정 의원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그때그때 적극 밝히며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평소 선명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앞장섰고,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단장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대선 해단식 성격의 모임 자리를 찾는 등 선거 몸풀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방문 일정과 22일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일정을 피해 출마 회견 날짜를 23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박 의원을 포함한 직전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 만찬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자칫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당정 '원보이스'를 강조함으로써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사퇴한 후에는 직무대행을 겸임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여야 지도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고 신경전

野 "국회 우습게 아는분... 재고를"
與 "청문회 보고 판단... 추경 협조"

여야는 2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고 비판하며 김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는 일도 (보도로) 나오고 있다"며 "벌써 총리가 되었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새정부 첫 추경 환영...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소비쿠폰 등 골목경제 회복 기대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해 "벼랑 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환영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얼어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가 골목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재명 정부의 '비상경제대응 TF'에 발맞춰 '골목경제 상황실'을 열어

그는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일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협조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 의정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다 보니 많이 왜곡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것(의혹)을 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므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골목상권 주변 도로 야간주차 허용 △광주공공배달업 활성화 △시·공공기관·전통시장·골목상점가 간 1대1 매칭 지원 등이 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2023~2024) 동안 보통교부세 1759억원이 미교부된 상황을 고려해 부담을 줄여주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새정부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의 동반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사명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공직사회에 "세상이 바뀌었다" 쓴소리

이한주 위원장 "전반적으로 실망"
검찰 등에 "노력한 흔적 보여줘야"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과제를 설계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한 주간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 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টে이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약 1시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다.

광주시의회, 오늘 '용적률 상향 조례' 비공개 토론회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객관적 판단을 돕기 위해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조례는 광주광역시 재의 요구로 보류된 상태였다.

23일부터 제333회 임시회를 여는 시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였다.

이 분과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사전 유출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업무보고 내용)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지역 공약으로 이를 다루고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국정 상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는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나가 공식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업무 보고 중단을 '갑질·적폐 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거 공간 기준 용적률 400%에 1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에서 130세대(540%)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23일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이후 시의회는 한 차례 더 의회를 거쳐 전자투표,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등 표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